

21세기를 대비한 高等教育

尹 正 一

(서울대 教育學科)

이 글은 大統領 教育政策諮問會議가 정부에 제안한 고등교육 관련 정책 중 주요한 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21세기를 대비하여 고등교육은 教育構造를 개편하고, 定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며, 地域間 均衡發展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自律管理體制를 확립하고, 研究機能을 활성화하며, 國際競爭力을 갖추 수 있도록 教育與件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1. 21 세기의 韓國社會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미래는 분명히 현재의 연장이지만 직선상에 위치하지 않고 다분히 벗어난 지점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未來社會는 樂觀적으로 전망될 수도 있으며, 로마클럽의 보고서들처럼 悲觀적으로 예측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래를 樂觀적으로 예언하게 되는데, 이는 현실 분석을 기초로 한 客觀的·蓋然的인 미래의 모습에다 우리가 選擇하는 소망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조화시키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의 모습을 예측·전당한 연구보고서들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다. 그 중 주요한 몇 가지 보고서와 자료들을 중심으로 21세기 세계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즉, 21세기

의 세계는 冷戰體制의 終熄과 국제협력의 가속화, 國際分業 및 국가간 상호 의존관계의 증대, 脫產業社會와 정보화사회의 고도화, 인간존중문화의 성숙, 그리고 地球村 共同體意識의 고양 등으로 특징지워질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과학화로 빚어진 인간소외나 인간경시에 대한 반성은 人間尊重 의식을 크게 고양시킬 것이다. 또한 인구나 식량문제, 南北隔差의 문제, 군비경쟁의 문제, 環境保護의 문제 등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 상황의 변화 속에서 21세기의 우리나라는 統一의 염원을 성취하고 先進國으로 부상하여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새로운 政治秩序가 확립되고, 고도 산업사회가 성숙되면서 脫產業社會가 전개되며, 경제적인 풍요를 실현하고 經濟正義를 정착시키

고, 정치적 민주화와 民主市民社會의 성숙을 달성하며,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을 가꾸고 즐기는 사회풍토를 정착시키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국내적 상황의 변화는 발전추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政策意志가 포함된 소망스러운 청사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 여건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敎育, 특히 高等教育이라고 할 수 있다. 敎育은 인간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고등교육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高級人力을 양성·공급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 1인당 GNP가 100 달러 시대인 1960년대에는 초등교육의 普遍化를 실현하여 국민학교 졸업자가 사회 기반인력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GNP 1,000 달러 수준인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中等敎育의 보편화를 달성하여 중등학교 졸업자가 사회의 기반인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GNP 10,000 달러 수준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는 高等教育의 보편화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고등교육 이수자가 사회의 基盤人力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치열한 國際競爭社會와 高度産業社會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高等教育의 主要問題

우리의 고등교육은 量的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質적으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就學率은 38.1%로 영국, 일본, 프랑스보다도 높고, 進學率은 45.9%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 특히 인구 만 명당 고등교육기관 在學生數는 395명으로 미국, 캐나다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質의水準을 대변하는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보면 32.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이며 대학생 1인당 公敎育費는 약 2,500 달러 정도로 선

진국의 1/2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미국의 하버드대학, 일본의 동경대학 도서관을 비교해 보면 서울대의 장서 총수는 하버드대학의 12%, 동경대학의 23% 수준이며, 연간 도서 구입비는 각각 12%, 6%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학생의 學習量을 외국 대학생과 비교해 보면 우리 대학생들의 학습량이 대단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講座當 適當平均 學習時間에서 외국 학생들은 5.1 시간인 데 비하여 한국 학생들은 3.6 시간에 불과하며, 강좌당 요구되는 리포트 수도 외국은 3.4개인 데 비하여 한국은 2.0개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고등교육은 이와 같은 質的 低下의 문제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1) 高等教育 體制와 機能의 多樣性 결여

지금까지 우리 대학교육은 국민들의 높은 대학 교육열과 폭발적인 고등교육 수요에 대처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敎育體制와 기능에 있어 다양성과 개방성을 확립하지 못하였다. 각 대학은 百貨店式으로 학과를 설치하는 경쟁을 해왔으며, 전문대학이나 단과대학은 그 교유의 正體性을 확립하지 못하고 4년제 綜合大學校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대학들은 고유한 特性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기능과 역할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더욱이 과학기술의 진보와 학문의 分化 및 專門化 추세를 빙자하여 기존의 학과를 세분화하거나 새로이 학과를 경쟁적으로 신설하고, 學科間·大學間에 학문의 장벽을 쌓고 있으며, 大學院을 학사과정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하여 별도의 시설이나 敎授要員 없이 설립·운영해 왔다.

2) 高等教育의 地域間 不均衡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하여 고등교육 기관을 지역별로 均衡 있게 배치하지 못하고 고등교육 수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해 온 결과, 고등교육 기회가 지역별로 不均衡을 이루

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분교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대학 인구의 首都圈 集中化를 초래하였다. 또한 대학 선립이 國土開發計劃, 人力需給計劃 등과 같은 국가 장기계획과 관련을 맺지 못함으로써 고등교육이 地域環境이나 지역적 특수성과 연계를 맺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生活圈域別로 볼 때 고등교육기관이 전혀 없는 지역은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됨은 물론 지역의 교육·문화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地域發展이 뒤처지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대학의 教育與件이 수도권 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이러한 대학 출신의 就業이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3) 大學 定員政策의 非合理性

대학 정원정책은 1965년 ‘大學生定員令’의 공포로 자유방임적 정책을 탈피하고 국가 통제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동안의 정원정책은 학과별 입학정원제, 계열별 입학정원제, 학과별 卒業定員制, 그리고 학과별 입학정원제로 변천해 오면서 人力需要에 근거를 두기도 하고 社會的 需要에 근거를 두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원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의 결여로 인하여 대학 정원과 고급인력 수요간의 불균형을 초래할은 물론 대학교육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수요와 대학 정원간에도 연계성이 상실되었다. 한편, 대학의 경우를 보면 대학의 教育與件이나 산업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원을 신청하거나 財政確保策의 일환으로 정원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4) 大學運營 및 評價의 自律性 미흡

정부의 통제위주 정책과 대학자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대학의 자율적 발전 등기가 결여되어 있고, 대학 운영의 민주성·전문성이 미흡하며, 대학교육의 自律的 評價管理體制가 부실하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에 評議員會가 설치되어 있으나 最高議決機構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총·학장 회의나 교무위원회 등에서 이를 대행하고 있다. 대학의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교수, 행정직원, 학생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행정의 民主化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으며, 행정관료이원 선발시 공개경쟁 방식보다는 特探方式을 활용함으로써 선발의 公正性을 결여하고, 適材適所 배치 원칙마저도 위배하고 있다.

5) 大學의 研究機能 미흡

교수당 학생수의 과다, 교수의 수업부담 과중, 연구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체제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대학 부설연구소의 기능이 부실하고 교수의 연구활동이 부진하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교수들은 연간 평균 1권 미만의 論文을 발표하고 10년에 1권 정도의 저서를 발간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3개 기관간 박사학위 소지 研究人力의 분포를 보면 1989년 현재 대학 79%, 연구기관 15%, 기업체 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民間財源과 政府財源을 합한 연구개발비 총액의 9.9%만이 대학에 투자되고, 70%가 기업체에 투자되며, 나머지는 研究機關에 투자되고 있다. 특히 정부 研究開發費의 76.2%가 연구기관에 투자되고, 16%만이 대학에 투자되고 있다. 日本의 경우에는 정부 연구비의 41.5%를 대학에 투자하고 있으며, 美國의 대학들은 研究開發費 총액의 70.1%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6) 國際化時代의 대비 不足

정치·경제·문화·사회 등의 생활과 제도의 전반에 걸쳐 開放과 국제화는 시대의 흐름이며 대세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국제 학술교류와 地域研究가 대단히 부진하다. 외국 대학과의 姊妹結緣이 형식적이며, 국외 유학생의 89%가 미국으로 파견되고 있고, 해외파견 한국인 교수의 수가 연평균 300명에 불과하며, 초청된 外國人 교수의 수도 연평균 340명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각 대학내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기구가 없으며,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부실하고, 생활비 지원이 절대 부족한 점 등 外國 留學生 수용체제가 결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政府招請 유학생의 약 21%가 유학을 중도 포기하거나 귀국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地

域研究의 경우에는 대학부설 地域研究所의 운영비가 영세하며, 지역전문가 양성기관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지역연구의 대부분이 아시아권 및 유럽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7) 大學施設 및 財政의 부족

대학들이 신설 당시에는 大學設置基準令에 의하여 시설을 갖추었다하여도 增員·增科하는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시설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의 학생수용률이 18%에 불과하고, 학생 1인당 장서수도 21권에 지나지 않으며, 實驗實習 機資材 보유율이 종류로 49.8%, 금액으로 39.8%에 불과한 실정이다. 財政의 측면에서 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선진국의 1/2~1/5 수준에 불과하며, 학생부담이 과중하고 民間財源 유인책이 결여되어 있는 등 대학의 재원구조가 불합리하다. 특히 학부모 부담률이 국립 36.9%, 사립 78.2%로 사립대학의 納入金 依存度가 대단히 높다.

3. 高等教育의 發展方向

현행 고등교육기관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다가올 21세기의 高度産業社會를 선도할 高級人力을 양성·배출하면서 國際化·民主化·多元化社會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고등교육기관간의 機能을 分化하고 體制를 多樣化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등교육체제를 다양화하며, 대학별로 특수성과 독자성을 발전시키도록 지원·조장한다. 특히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수용할 수 있도록 平生教育體制를 확립한다.

둘째, 고등교육기관간의 다각적인 連繫體制를 확립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고등교육을 원하는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개방하기 위하여 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獨學學士考試制 및 전문대학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셋째, 고등교육의 質的 水準을 제고시키기 위

하여 教育與件을 획기적으로 확충·개선한다.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대폭적으로 감축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도서관 및 실험·실습실을 확충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대학 자체는 물론 政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경주한다.

넷째, 고등교육기관간에 교육·연구의 자율적 競爭과 協力體制를 구축한다.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는 선의의 경쟁과 더불어 공동협력의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경쟁은 대학별 特殊性을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에서 質的 水準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협력은 한정된 人的·物的 資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대학간 상호보완을 위하여 필요하다. 자율적 경쟁과 협력 체제는 국내대학간은 물론 외국대학과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고등교육기관의 對內的·對外的 評價制度를 정착시켜 나간다. 최근에 일부 실시되고 있는 大學評價認定制度는 대학 스스로 대학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責任을 지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평가는 自體評價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결과는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여섯째, 고등교육정책을 統制爲主에서 支援·助成爲主로 전환시켜 나간다. 대학평가인정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대학의 自律的 管理能力이 향상됨에 따라 대학입시전형, 학생정원 책정 등 學事管理 전반에 걸쳐 대학의 자율권을 대폭 확충시킨다. 정부는 고등교육의 지역간·학문영역간 균형발전을 조장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육성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4. 高等教育의 發展課題

1) 高等教育 構造의 改竊

고도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력을 양성·배출하고,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간 기능과 역할을 분화하여 대학체제를 다양화해야 한다. 대학의 特性化를 유도하기 위하여 學士課程만 있는 대학, 교육기능에 주력하는 學士課程中心 대학, 연구가

능에 주력하는 大學院中心 대학, 교육과 연구의 균형을 유지하는 大學院並設 대학 등으로 구분·육성하며, 종합대학교 지향풍토를 분식시키기 위하여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의 구분을 폐지하고, 總·學長 명칭을 자율화해야 한다. 또한 대학교육체계를 學術教育指向大學과 專門職業(또는 實際)教育 지향적인 대학으로 구분하여 대학별로 특수성과 독자성을 유지·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학별 比較優位分野의 증점 육성을 통하여 기능과 역할을 특성화하되, 이를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聯繫人이나 고등교육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독학학위제도 등의 開放教育制度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대학, 방송통신대, 산업대 및 독학학위제도, 전문대간의 連繫를 강화하고, 전문대학과 實業系高校를 연계한 5년제 과정의 설치·운영을 허용하며, 대학원과 연구기관간의 協同學位課程 설치·운영도 필요하다. 특히 예술·체육·문화 분야 등은 特殊目的의 大學으로 발전시키되, 중등교육단계나 전문대학과정과 대학(원)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高等教育機關의 地域間 均衡 配置

生活圏地域로 최소한 대학 1개교, 전문대학 1개교가 없는 지역과 고등교육 수용률이 평균 이하인 지역에는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과 地域均衡發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고등교육 수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고등교육 정원 증원시 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한다. 또한 地域産業發展 展望에 따라 고등교육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되 工團背後 및 인근 도시에는 국립 위주의 개방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工團密集地域에는 聯合專門大學(가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연합전문대학은 공단 입주 기업체 중 다수의 기업체가 공동투자자로 기본 시설·설비를 확보하고, 기업체별로 희망학과를 개설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敎養課程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와 동시에 고등교육기관 設立認可政策을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합리적인 대학설립인가 基準을 개발하여 엄격히 적용하며, 설립인가의 審査節次와 結果를 공개하여야 한다. 특히 地域均衡發展이라는 차원에서 대학 및 전문대학 설립 適任地 및 認可條件(학과, 정원 등)을 사전에 告示하고, 사전 고시된 지역과 인가 조건에 한하여 심사후 인가하는 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한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地方自治團體의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 특수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國立大學의 설립을 억제하고 市·道立大學의 설립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3) 大學定員의 自律化

계속 증대하는 고등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고등교육 정원을 彈力的으로 책정하되, 4년제 대학의 정원 증원은 가급적 억제하고 專門大學,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등에서 고등교육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정원책정 방식은 [현재와 같이 정부가 대학별·전공계열별 정원을 책정하고, 學科別 定員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대학별 전체 정원만을 책정하며, 전공계열별 및 학과별 정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문·사회계 정원은 社會需要에 의하여, 자연계 정원은 人力需要에 의하여 국가가 그 총량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대학의 정원 조정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戰略的 育成分野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분야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대학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大學評價認定制度가 정착됨에 따라서 대학정원이 대학별로 자율화되어야 한다.

定員政策과 관련하여 大學入學銓衡도 대학별로 완전 자율화되어야 한다. 대학별로 다양한 입시전형방법을 개발하여 대학의 자체 기준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학생 입·퇴학에 관한 대학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여 대학 자체의 기준에 의해 入學 및 退學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총·학장에게 전적으

로 위임해야 한다.

4) 大學自律管理體制的 確立

대학의 자율적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大學評價認定制度를 정착시켜야 한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제도는 평가기준 설정, 大學診斷, 평가기준에 합격한 대학의 명단 작성·발간, 認准된 대학이 계속적으로 평가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 점검의 4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간 자율협의 기구로서 '大學評價認定委員會'를 설치하고, 학부기구로 學位課程別, 系列 또는 專攻領域別 分科委員會를 설치하며, 대학에는 自體評價委員會를 설치하여 매년 자체 평가 결과를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

한편, 대학별 자율적 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대학의 企劃機能을 강화하고, 대학 운영의 管理情報體制를 도입하며, 국립대학을 特殊法人化하고 국립대학에 최고의결기구로 理事會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議決機構로서 大學教育委員會를 설치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대학교육기관 設·廢 認可, 대학평가 결과 공개 및 이를 바탕으로 定員調整과 재정지원, 대학교육발전기금 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는 과도적인 조치로 우선 교육부내에 설치하되, 장기적으로는 教育部에서 분타·독립하여 설치해야 한다.

5) 大學 研究環境의 改善

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정부 출연연구소 위주의 재정지원에서 大學附設研究所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새로운 연구소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대학 부설연구소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部處間의 대학 연구지원 역할을 정립하여,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일반·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지원토록 하며, 기타 부처는 科學技術에 관한 目的事業 위주로 지원토록 하고,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간 연구지원이 균형을 유

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產·學·研 協同體制를 강화하여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이 실험실습 기자재와 시설을 공동 활용토록 하고, 연구자료와 技術情報 등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을 대학 겸임교수나 碩座教授로 일용하는 한편, 產業體 委託教育制度를 도입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체 연구소 근무실적을 대학원과정의 研究學點으로 인정해야 한다. 특히 과학적 연구결과를 신속히 產業技術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科學公園(science park)을 대학 주변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학공단은 동일지역에 집결해 있는 대학, 기업체 부설 또는 政府出捐研究所 등이 기술혁신 촉진, 첨단산업체 창업, 기반시설의 공동사용, 대학과 기업체의 공동연구, 대학(원)생에 대한 실제적 修習機會 제공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6) 高等教育的 國際競爭力 培養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선 地域 및 國際關係研究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 부설 地域研究所를 특성화하고, 국가 수준의 기존연구소(예: 世宗研究所)를 지역 및 국제관계 연구소로 그 성격을 전환시키며, 각 분야의 政府出捐研究所에 지역연구부서를 설치토록 권장해야 한다. 戰略적으로 필요한 국가에 국비 유학생을 선발·과건하며, 대학원의 관련학과에 地域研究科를 설치토록 하고, 여건을 구비한 대학에 國際大學院을 설치하는 등 地域專門家와 국제관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外國語 教育에 있어서도 외국어 특수목적 전문대학을 설립하고, 同時通譯大學院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外國語能力 技能章制度를 도입하여 각종 임용고사에서 특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에 외국인 학생일무를 전담하는 國際教育部를 설치하고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외국인 유학생 受容體制를 확충하는 한편, 정부 초청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한국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國際學術交流를 증진할 수 있도록 國際學術交流基金을 설치하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Fellowship을 신설하며, 정부 및 개별대학 차원에서 외국대학과의 교수 및 학생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해외유학 및 研修政策에 있어서도 국비 유학생 파견국을 다원화하고, 해외 常駐學者 파견을 지원하며, 海外 敎育院을 '敎育센터'로 확대·개발하는 등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특히 외국대학의 韓國學 研究支援을 확대하며, 主要著作品의 외국어 번역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에서 국내에 대학 신설 또는 分校 設置를 희망할 경우에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大學設立審査基準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7) 大學施設 및 財政의 擴充

대학의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法令으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지면 施設基準을 자율화해야 한다. 외곽시설의 확보기준을 最低基準에서 적정기준으로 상향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기숙사시설, 각종 편의

시설, 실험·실습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도서관의 기능은 情報化社會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情報資料센터'로 확장하여 국가 기간산업망의 敎育研究網과 연계시켜야 한다. 대학간·연구소간 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정보자료 관리체제를 표준화해야 하며, 대학 도서관을 타대학의 교수 및 학생, 일반인 등에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생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해야 한다.

대학재정을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納入金 策定을 합리화하고, 民間寄附金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大學敎育發展基金'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은 대학의 시설개선과 우수교수의 확보, 연구의 활성화 등 대학의 學事發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학에 長期低利로 대부하며, 大學敎育委員會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기금과 운영재원은 國庫出捐金과 보조금을 기본으로 하여 일반 기업체와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寄附金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